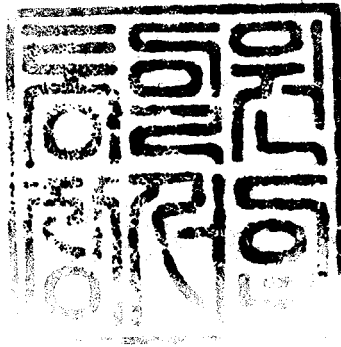


# 독일통일의 전개과정

자유베를린대 박성조 교수



국토통일원

## 머 리 말

독일은 지난 12월2일 전독일 총선거를 마침으로써 1989년 11월 9일의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만 1년여만에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실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로 '20세기의 기적'이라고 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3월 18일 동독지역에서의 자유선거를 통해 공산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고, 7월1일부터 화폐, 경제, 사회통합을 실시하는 한편 10월 3일에는 정치통합을 실현함으로써 통일의 내적 측면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외적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점령국과의 「2+4회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여 지난 9월12일 모스크바회의에서 독일통일에 관한 최종합의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침착함과 단결력은 독일민족의 저력을 다시한번 과시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독일은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통일독일에 대한 주변국가의 경계등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과정은 구체적 사정은 우리와 다르지만 같은 냉전구조하의 분단국이었던 점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후 서독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평화공존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접촉을 통한 변화’를 꾸준히 추구해 온 것이 오늘 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책자는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박성조 교수가 베를린장벽 해체이후 독일통일과정을 현지에서 지켜보면서, 주요계기마다 정리한 글을 편집한 것입니다. 박성조교수는 이글을 통해 독일정부와 국민들이 동서독간 정치·경제·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생동감있게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의 시각에서 독일통일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책자가 우리에게 통일은 어떻게 가능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리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아울러 강의와 연구에 바쁜중에도 귀중한 원고를 보내준 박성조교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0년 12월

통일정책실장 최 문 현

# 목 차

---

『3월 18일』 동독 정권을 어느 정당이 잡을까? .....	5
『통일 비용』은 얼마인가? .....	14
통독을 위한 헌법적 근거 .....	20
통화통합으로 가는 길 .....	25
화폐 · 경제 · 사회통합과 서독 국내정치 .....	29
화폐 · 경제 · 사회통합은 새로운 출발 .....	34
화폐 · 경제 · 사회통합 이후의 동독경제 .....	40
통독의 수도는 「베를린」인가, 「본」인가? .....	45
화폐 · 경제 · 사회통합 2개월후의 평가 .....	50
동독인은 게르만 민족인가? .....	56
『11월 9일』 장벽철거 1년의 평가 .....	64
『12월 2일』 독일총선거 : 독일통일의 완성 .....	69

## 『3월 18일』 동독정권을 어느 정당이 잡을까?

---

3월 18일은 동독에서 히틀러가 정권잡은 이후 처음있는 자유선거이다. “민주주의를 배운다”(Demokratie Lernen)라는 용어를 텔레비전, 라디오 등 매스컴, 일반대회에서 흔히 듣는다. 토론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배운다고 동독인은 공공연하게, 부끄러움없이 이야기 한다.

이번 자유선거는 따라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배움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선거에 참가하는 동독정당과 정치단체는 무려 50여개이다. 막상 선거전이 격렬해지자 정당·정치단체 상호간에 정강토론보다, 감정적인 표현을 구사하면서 경쟁자의 과거 공산당(SED)과의 직접·간접적인 협력관계를 폭로하며 비난하고 있다.

그럼 어떠한 정당들이 우세한가? 정당판도는 현재 서독의 정당시나리오와 유사한 점이 많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동독에서 만들어진 정당은 서독에서 파트너를 찾으며, 서독에서는 서

독정당과 유사한 정치단체가 없으면 직접 그곳에서 자매정당을 설립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가장 우세한 정당을 열거하고자 한다.

구 분	동 독	서독 자매정당
우익측	기민당(CDU)	기독교민주당(CDU)
	독일사회당(Deutsche Soziale Union)	기독교사회당(CSU)
	민주주의 개시(Demokratischer Aufbruch : DA)	
	※ 위 세정당이 연합하여 진보연맹(Allianz für Fortschritt)으로 선거에 참가	
	공화당(Republikaner)	공화당(REP)
	농민당(DBD-Bauern Partei)	
중도파	자유민주당(LDP)	자유민주당(FDP)
	신토론회(Neues Forum)	
	신민족독일당(NDPD-National demokraten)	
좌익측	동독공산당(PDS)	
	사민당(SPD)	사회민주당(SPD)
	통합좌파(Vereinigte Linke)	
	녹색정당(Grüne partei)	녹색당(Die Grünen)
	독립부인연맹	
	※ 녹색정당과 독립부인연맹은 연합하여 선거에 참가	

가장 우세하리라고 생각되는 정당은 동독 사회민주당이다. 최근 여론조사(「라이프찌히」 여론조사연구소)에 의하면 절대다수인 53%선을 넘고 있다. 그리고 기민당은 13%였고 과거의 공산당 PDS는 12%선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불과 3-4% 이하이다. 이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론결과를 대략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사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다.

물론 선거전 종반에 들어가서 약간의 여론 변동이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진보연맹과 공산당이 각 2-3%씩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세한 3개정당을 살펴보자.

공산당(SED)은 급속도로 몰락하여 공산주의·사회주의에 식상한 동독국민에게 새로운 정당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과거의 지도자들(「호네커」, 「미탁」, 「크렌츠」 등)을 제명하는 한편 SED 명칭에다 PDS(Partei Demokratischer Sozialismus)를 추가하여 SED-PDS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공산당명 SED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만 PDS라고 하고 있다. 지도자급에 있는 정치가들(특히 「드레스덴」시 시장「베르크호퍼」)이 탈당하고, 변호사로서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있던 공산당 반대파들(예를 들면 「헨리히」)을 변호하던 「기지」(Gisi)가 온건하고 통합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몰락하는 정당을 어느 정도 구제하고 있다. 특히 개혁의욕을 가진 젊은층의 정당원을 충원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현재 동독 수상 「모드로」를 선거전에 제 1 대표자로 임명함으로써 「모드로」의 서

민적 인적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PDS가 어떠한 선거결과를 획득하더라도 여당으로써 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당이 절대다수를 얻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며, 이론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겠으나, 다른 정당들이 부패와 독재의 상징인 공산당과는 절대 연립하지 않는다고 이미 명백히 표명하며 선거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독 기민당(CDU)의 강력한 강제적 종용에 의하여 수일간 사이에 이루어진 우익 3개정당의 모임인 진보연맹(여기에 다른 두 우익정당은 「콜」수상의 두차례 종용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았다)은 난산의 경험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동독 기민당(CDU) (특히 그 당수인 De Maiziere)이 옛날 공산당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소위 말하는 『공산 블럭정당』이라는 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독 여당 당수인 「콜」수상이 지원한다해도 선거실패가 확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서독 기사당은 미리부터 동독에 파트너 정당을 형성하여 기반을 만들었으나, 서독 집권정당인 기민당은 동독기민당과 깨끗하게 관계를 단절하고 신정당을 형성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DA의 대표인 「슈누어」(Schnur)는 반정부 활동에 공헌이 많았으나, 정부로부터 석연치않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



은 사실(나중에 이것이 반증됐으나) 때문에 한때 원탁회의에도 참가하지 못한 사실까지 있어 DA의 지도자로서 약간의 결점을 갖고 있다.

선거에 우세할 사민당은 공산당에 동조한 것도 없고, 2차대전 후 의회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발자취를 감춘 탄압받고, 금지당한 정당으로써, 사민당이 전통적으로 강한 동독지방에 다시금 부활하기 시작하여 짧은 시일내 가장 효율적인 정당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원이 10만명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사민당 당수인 「뵘메」(Ibrahim Böhme)는 감옥생활을 거친 이론적으로도 세련된 40년초반의 인물로써 3월 18일 이후 동독수상이 될 것이라고 자신도 언급하고 있으며 다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동방정책의 기수이면서 전 서독수사인 「빌리·브란트」가 동독 사민당 명예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그는 동서독 사민당 명예회장이 되어 그 자신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한사람을 통한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진 결과가 됐다.

상기한 바처럼 사민당은 옛날의 고향, 깨끗한 과거, 강한 설득력, 강한 리더쉽이라는 이미지로 많은 동독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드로」수상, 「베르크호퍼」드레스덴시장, 「라이프찌히 게반트하우스」오케스트라 지휘자 「마주루」(다음 동독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등도 근본적으로 동독의 사민당에 호감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정당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사실상 동독 정당중에서 사민당만이 정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이프찌히」사에서 통과된 동독 사민당 정강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통일로 가는 시간표이다. 즉, 동·서독이 헌법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통독헌법의 기반은 서독의 기본헌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독의회가 제일 처음 할 일은 현 독일의 국경을 최종적인 것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독립국가 자격으로 하나의 연방국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독 보수계 기민당이 주장하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모델과는 상이하다. 즉, 동독 기민당은 『흡수를 통한 통일』을, 사민당은 『동등한 입장에서 연방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민당의 주장은 서독은 동독을 급작스럽게 흡수해서는 안되며 점진적으로 통일로 가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동독 사민당의 점진적 통일전략의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전독일 정치제도기구 형성

신국회가 제일 먼저해야 할 결의는 독일연방국가 형성이고, 이를 위해서 4월에 양독정부는 통일을 위한 제조약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고, 서독기본헌법을 토대로 한 통독헌법을 제정하여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 이후 전독 국회선거를 치룬후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방국회가 개최됨과 동시에 동서독의 국회는 해산된다.

#### ② 행정개혁

동독국회는 동독에서 5개주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고 1990년 여름에 주의회 선거를 실시한다.

### ③ 구주통합

양독국회가 동시에 현재 독일국경을 최종적인 국경으로 결의하며, 4월에는 4개 전승국과 양독이 인접국가들과 같이 통독을 위한 안전체제를 형성한다.

그다음 가을에 「헬싱키」회의를 개최하여 전유럽 안전체제를 결의한다.

### ④ 법질서를 위한 개혁

독일 통일은 사회통합⇨통화통합⇨경제통합 단계로 가는 법질서를 요한다.

동독 사민당은 상기 4개의 단계적 통일전략과 관련하여 늦어도 7월 1일까지 사민당이 주도하는 신정부가 서독통화 DM을 동독에 통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동독경제체제는 사회적, 환경보호를 위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기초적인 법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등 의료보험제도 개정이 필요하며, 공동결정권 모델도 서독식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모든 통독을 위한 조치·제도는 EC가입국과 협의하고 통독은 구주통합의 일환으로서만 추진되어야 하며, 민족국가라는 사고방식은 궁극적으로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토마스·만」(Thomas mann)의 표현을 빌리면 『유럽적 독일』이지, 『독일적 유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3월 18일 예상대로 『사민당』이 절대 다수를 획득하게 되면 사민당 일색의 동독정부와 기민당 위주의 서독정부간의 통독을 위한 협상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물론 동독정부가 서독 기민당에 의하여 주도된다면 통독문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빠른 시일내 통일, 즉 동독이 흡수되는 형식이 될 것이므로, 많은 사회문제 이외에 EC를 비롯한 독일 인접국가가 공포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서독정부가 주는 동독에 대한 부흥원조도 활발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민당이 동독정부를 주도하게 되면 서독정부의 활발한 대동독 원조를 기대하기 힘들다. 나아가서는 사회민주주의가 전통적으로 강한 동독세력이 연방독일에서 점차 확대되어, 서독의 12월 2일 연방선거에서 「콜」의 도전자인 「자-르」주지사 「라폰테인」(사민당)이 승리하는 경우에는 통독문제가 EC가맹국가, 인접 국가와의 합의하에 구주질서속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동독 사회민주당이 3월 18일에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설문 『통일문제를 가장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은 어느 정당이나?』에 대한 응답을 보면 동독국민의 74%가 사민당이라 보고 있으며 기민당은 단지 20%이다.

본인은 다음 동독정부가 독자적 사민당 정부이든지 그렇지 않고 연정이든지 사민당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한다.

#### □ 追告

선거결과를 보면 기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연맹이 압도적 승리를 획득했다. 기민당은 48.15% 득표, 193의석을 획득하여 절대다수선에 접근하였다. 기민당만이 40%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선거전의 예측에서 선두에 서있던 사민당은 불과 21.84%에 그쳤다. 공산당(PDS)은 예상외로 16.33%를 차지하여, 그 세력이 여전히 간과할 수 없음을 과시했다.

그럼 이와 같은 기민당의 승리는 무슨 이유때문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동독국민의 “빈곤속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동기로 볼 수 있다. 즉 서독인과 같은 부유한 생활을 향유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동기였다. 부유한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는 서독 야당권의 정당, 즉 사민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현재 집권당인 「콜」의 기민당을 지지해야만 부유한 생활로 가는데 첩경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콜」자신도 6차례의 동독선거유세에서 기민당만이 동독경제부흥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다들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었다.

## 『통일비용』은 얼마인가?

---

『통일비용』이라는 용어가 양독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고 통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독국민이 물질적으로 희생해야 하는지가 중대한 이슈로 되고 있다. 왜 통일비용이 필요한지? 간단히 논한다면 동독과 서독경제격차를 조속한 시일내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투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대 이상적인 통일의욕은 점차 양독 국민속에서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담선에서 통일하자는 것이 정설로 되고있다. 서독정부의 이상적인 통일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만해도 서독국민은 동독 이주민 및 피난민을 수용할 용의가 대단했다(63%). 지금 현재는 불과 22%정도로 하락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독국민이 여러면에서 현실적으로 통일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동독 이주민수가 증대함에 따라 일평균 2,000명 정도를 서독에서 수용해 온 결과 우선 주택문제

가 심각하게 됐다. 교회, 학교, 체육관, 노후된 공장건물을 수용소로 변경하고, 라인강의 여객선까지 이주자 임시 수용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취업사정은 물론이고 사회보장제도 등 종전에 서독이 동독피난민 이주자에게 제공했던 특혜를 점차 삭감하고 있으며, 심지어 각주의 몇개도시는 이주자 수용능력이 없어 이주자 수용 사무를 중지한 곳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와같이 많은 인력(특히 숙련공, 고급인력)이 서독에 이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동독경제의 공동화현상이다. 즉, 경제 재건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외국자본과 제휴하는 동독기업까지도 부족한 인력으로 출발하게되는 저조한 생산성이 예상되고 있다. 5월로 예정됐던 동독선거가 3월 18일로 당겨진 것도 하루라도 빨리 합법정부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양독간의 협상으로 들어가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조기통화통합을 실시하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독 사민당은 만약 동독선거에서 승리하면 태환율 1:1의 통화통합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정강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1:1로 태환율이 도입될 것인지는 큰 의문이다.

우선 서독 중앙은행은 현재 동독의 전채권액, 차관액, 부채액을 알지 못하고는 태환율 책정토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동독국민의 지금까지의 저축잔액은 적정태환율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독은 태환율 책정이전에 서독과 유사한 효율적인 은행제도가 필요하다.

결국 서독체계를 동독에 도입하면 동독자체의 경제, 통화, 화폐정책에 관한 일부주권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며, 동독이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경제적 면에서 통일은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태환율을 1:1로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유럽통화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서독통화량(현금+보통예금=M1)은 약 3,800억DM(GNP의 19%)인데, 1:1태환율을 기준으로하면 동독과 합하여 5,800억DM이 되어 GNP의 26%이상이 되고 만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할 경우에는, 1:6-7태환율로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동독인은 100마르크까지 1:1, 추가적으로 100마르크는 1:3으로 태환할수 있으므로 동독 마르크 암시장이 대단히 성행하고 있으며, 동독·동베를린을 여행하는 서방인·서독인에게 동독인들이 실증이 나도록 “돈을 바꾸겠느냐?”고 묻는다.

현재 알려진 『통일비용』추계를 본다면, 동독의 국민소득 수준을 현재 서독인의 1/4로 보고, 동독인 이주를 방지하려면 1/4수준을 최소 2/3수준으로 올려 놓아야 하는데, 이 2/3수준은 서독 평균임금의 약 40% 정도이므로 상호간 격차있는 임금수준을 감안하면 서독인의 1/10의 소득을 동독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는 것이다(앞으로 최소2-3년간). 그리고 이렇게 7-8년 계속한다면 동독에서 새로운 경제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상기한 1/10은 서독의 국민총생산의 6.5%에 해당한다. 이는 EC본부에서 보는 5년간 약 8%추정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물론 EC에서는 서독이 극심한 소득이전을 동독에 함으로써 서독이 EC에 지출하는 예산이 감소될 것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

EC는 부연하기를 서독정부가 소득세를 증가시키든지 혹은 부채를 상정해야 한다고 보나, 만약 소위 말하는 『동독세』(DDR-Abgabe)를 도입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서독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정책을 구사하게 되고, 이는 DM절상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유럽통화체제(EMS)를 혼란시킬 것이다.

영국 정부는 작년에 간신히 EC내의 통화통합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룩했는데, 현재 동서독 통일이 추진됨에 따라 양독간의 통화통합이 우선적으로 성취될 경우 서독에서 동독으로 막대한 소득이전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벌써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독국민의 65%가 국회에서 소득세 증가 결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서독 국민 49%는 통화통합을 해도 도이취 마르크는 안정성을 가질 것이라고 보며, 47%는 우려하고 있다.

여하간 금년 서독 연방정부, 주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만 동독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300억DM에 달하고 있다. 이 액수속에는 중

전부터 지불하고 있던 의무액에 현재 변방주가 경쟁적으로 동독에 지원하고 있는 액수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서독정부가 추가 예산에서 책정한 60억DM도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동독수상이 「본」에 방문했을 때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150억DM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다면 최근 정부차원에서 공여된 60억DM 차관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가? 공여조건은 이자율 6.5%, 거치기간 20년, 상환태환율 1:2.4DM이다. 지원될 중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독기업이 동독에 투자할 때
- ② 동서독 합작기업이 설립될 때
- ③ 동독기업(서독 자본 참가없이)

이러한 조건하에서 중소기업이면 특혜를 받는다.

사업별로는 :

(1) 관광사업

호텔, 음식점, 여인숙의 설립, 확장, 개수

(2) 새로운 기업설립

자영사업으로써 신사업 설치가 필요한 모든 부분. 단, 관광분야는 제외.

(3) 환경보호

하수정화, 폐기물 처리, 오염방지, 에너지절약 위주이며 환경파괴를 피할 수 있는 사업

(4) 생산시설 개선사업

생산시설개선, 생산가동 능력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주로 함. 그러나 상기의 정부차원에서의 차관은 빙산의 일각이다. 예를 들면 개인은행, 동독은행 및 기업에게 공여될 차관은 전연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서독정부 여당인 기민당의 『기본정책』(문서)에 의하면 “동독경제를 근대화하는데 총 500Billion-1300Billion DM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서독정부는 서독은 물론 서방 기업의 대동독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동독은 년 8-10% 경제성장을 보여 줄 것이며, 특히 교통, 통신, 건설, 환경분야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가지 예를 들면 동독의 매년 자동차 수요는 36만대, 매년 전화수요는 80만회선이다.

결론적으로 서독은 동독경제 부흥을 통일이라는 차원에서만 아니고 자체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서독에서 유행하는 표현은 “2차대전후 서독에서 우리가 허리를 바싹 줄라매고 노력했기 때문에 라인강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었다. 90년대 우리들은 동독을 위해서 다시 한번 희생하자.”라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독일인 자부심인 “우리도 이젠 과연 멋진 우리다.”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

## 통독을 위한 헌법적 근거

---

『통일』로 가는 헌법적 접근으로서는 두가지 근거 내지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학자간에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 논쟁은 서독 및 동독정당 시나리오와 대조해 볼 때, 학자들의 이념적인 선호성과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두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서독기본헌법 제23조(이 방법을 주장하는 자를 『23조파』라고 칭한다.)

② 서독기본헌법 제146조(이 방법을 주장하는 자를 『146조파』라고 칭한다.)

『23조파』의 주장은 1957년에 서독 기본헌법 23조에 의하여 「자-르」주가 서독연방공화국에 병합됐듯이, 동독이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독에 그냥 『병합』(Beitritt)되면 통일이 된다는 것이다.

병합논자의 근거는 납득할 수 있다. 우선 동독이 서독에 병합됨으로써 자동적으로 EC에 통합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양독의

회가 통일을 위한 특별한 결의 및 선거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양국이 합병됨으로써 외교정책상으로도 많은 이점을 가져와 독일의 외교적 신빙성을 나타낼 수 있다.

『23조파』의 대부분은 법학자, 특히 헌법학자들로서 『빗트볼크 Circle』(매년 거행됨)의 멤버들이며, 보수주의적 법해석뿐만 아니라 기독교민주당(CDU), 기독교사회당(CSU)에 가까운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대표자들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져 있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Günter Dürig(Tübingen대, 헌법주석으로 유명)

Wilhelm Grewe(Bonn대, 헌법·국제법학자)

Wilhelm Kewenig(Kiel대, 전 베를린주 내무장관)

Rapert Scholz(Berlin대, 전 연방정부 국방상)

이에 대해 『146조파』는 법학자, 사회과학자, 철학자 등으로 반드시 법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대표자들은 수주전에 공포된 청원서(petition)의 서명파들인데 서명한 문서의 타이틀은 “국민은 어디 있는가:독일 제헌국회 설립을 주장하면서(Wo bleibt das Volk?-Pläddoyer für eine verfassunggebende Versammlung)”이었다.

기본법 『146조』의 내용은 “독일민족의 자유결의에 의하여 신헌법이 유효하게 되면 서독의 기본헌법은 그 유효성을 상실한다.”이다. 『146조파』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무혈민주혁명에 의하여 쟁취한 동독의 자기 존엄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병합을 강요할 수 없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실적을 공개토론에 의해서 더욱 확보해 나가야 한다.

-양독 국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추구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신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146조파』는 나아가서 기본헌법 서문에 명기되어 있는 헌법정신으로써 “전독일 국민이 함께 미래의 정치체제에 관하여 자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3조』에 의한 통일은 동독을 식민지화 하는 것과는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미스러운 사실은 『146조파』에는 자민당(FDP), 사회당(SPD) 등의 비보수계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유명한 철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Jürgen Habermas (Frankfurt 대)

Ernst Tugendhat (Berlin 대)

Michael Theunissen (Berlin 대)

사회과학자로서는

Wilhelm Hennis (Freiburg 대)

Oskar Negf (Hannover 대)

Tiegen Seifert (Hannover 대)

『146조파』는 3월 18일 동독선거를 부인한다거나 그 정당성 또는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전독일 국민의

공개토론없는 『23조』에 의한 동독병합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야당 또는 비보수계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서독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FDP)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전역에서 또는 동독에서만 선거를 통하여 전독일국회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기사당과 기민당 일부는 동독에서 통일의회를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의원을 뽑자고 주장하나, 자민당·사민당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러한 주장에는 상기한 병합이론과 같이 동독의원을 2류(Second class)로 취급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현 서독수상의 통일 스케줄이 대단히 급하다는 데 있다. 그는 통일된 독일의 수상으로써 독일역사에 제 2의 「비스마르크」처럼 남고 싶어한다. 「콜」수상이 생각하는 전략은 늦어도 내년 후반에 동독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독 기본헌법 39조에 “선거는 4년마다 시행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

금년 12월초에 선거가 시행되어 새 국회가 구성된다면 결국 내년 통일 선거를 위해서는 국회해산이 필요하며, 국회의 조기해산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수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동독으로 가는 방법의 헌법 정책적 해석은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조만간 발족하는 동독정부의 연정에 참여하게 될 동독 사민당(SPD)이 서독 사민당과 많은 점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감안할 때 성급한 통일추진에도 다소의 수정이 예상된다.



## 통화통합으로 가는길

---

동서독 통일달성의 삼위일체를 경제통합, 통화통합, 사회통합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현재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통화통합이다. 서독정부는 통일일정을 발표하면서 7월초에 통화통합을 달성할 것이라고 명백히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 토론되고 있는 통화통합 달성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독인이나 서독인들은 동서독 화폐태환율을 1:1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화폐교환이 논의되기 시작한 초기에 서독측에서는 1:1의 태환율이 많은 문제를 동독에서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동독정부의 강력한 요구 등으로 「콜」수상은 동독선거전에서 빠른시일내 1:1로 태환율을 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 통화통합에 관한 많은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최근 서독중앙은행에서 1:2로 태환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큰 정치문제가 일어났다.

1:2태환율은 서독중앙은행이 서독정부에 비밀리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인 즉 통화통합시에 기본적으로 동독화를 서독화 1:2로 교환하되, 동독인의 저축액은 2000마르크까지 1:1로 교환해 주도록 추진하자는 것이다.

서독연방의 자민당(FDP)계의 정치가들과 야당의 사민당(SPD)은 물론이고 동독의 연정성립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기민당(CDU), 사민당(SPD) 및 현재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모드로」 수상(PDS) 등은 이구동성으로 통화통합이 1:2태환율로 될 경우 「콜」수상의 공약위반이라고 했으나, 「콜」수상은 그러한 공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다. 서독의 「바이젤」 재무장관도 중앙은행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통화통합에 관한 토론이 현상태로 계속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첫째, 만약 1:2의 태환율이 확정된다면 그간 저조해진 이주자수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 둘째, 5월에 동독지방의 회선거가 실시되는데, 이 선거는 3월 18일 선거와는 판이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며 기민당의 낙승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1:1의 공약 위배가 선거전의 이슈가 될 때 지난 선거때의 40%이상 지지획득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통화통합의 근본구상은 무엇인가?

### (1) 임금과 월급

현재 동독의 임금수준은 1,250마르크이며, 임금추가액(휴가,

성탄절 보조, 년 1-2회 보너스, 병환보조 등등)을 50마르크로 보면 전부 1,300마르크인데, 이것은 서독임금수준(4,000마르크)의 32%이다. 1:1로 했을 때 동독의 임금수준은 단시일내에 2,000마르크까지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독수준의 50%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수준은 현재 동독의 생산성으로써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 없다.

만약 1:2태환율을 도입한다면 서독임금의 1/4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동독기업 자체로써는 임금인상의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정부보조금 등으로 서독수준의 40%까지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2태환율은 어느정도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 (2) 연 금

현재 동독인의 연금 수준은 480마르크로 본다. 서독은 1,600마르크이다. 즉, 동독 수준은 서독의 30%정도이다.

만약 서독 사회노동장관의 공약대로 한다면 동독수준은 880마르크까지 올라 서독수준의 56%에 달하게 된다. 이것은 1:1로 보았을 때이나 만약 1:2를 기준으로 하면 동독 수준이 서독수준의 불과 36%로써 현재 형편보다는 약간 좋아지는 것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동독인의 저축금이다.

자민당 당수 「람브스도르프」의 말에 의하면 “동독인은 동독의 연금혜택이 보잘것 없으므로 대부분이 열심히 저축해 왔다. 따라

서 저소득자의 저축액을 1:2로 태환해준다면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공약의 위배이다.”라고 했다.

동독의 사민당 부당수 「메켈」은 1:2가 발표되자 간단하게 말하기를 “1:1과 사회보장제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연 가능할지?

## 화폐 · 경제 · 사회 통합과 서독 국내정치

---

5월 18일 동서독간 경제·통화·사회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조약(Staatsvertrag)이 양독의 재무장관-서독 「바이겔」(기사당, CSU), 동독 「롬베르크」(사민당, SPD)-에 의하여 서명됐다.

조약서명에 대해 「콜」서독수상은 『민족통일』이라는 용어를 여러번 언급하면서 “반드시 통일된 독일은 유럽 공동평화질서체제 속에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독수상 「드·메지어」는 독일 민족통일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동독 경제건설에 치중하고 시장 경제체제를 처음으로 배워, 하루라도 빨리 협조적인 서독과의 조화를 위해서, 균형이 잘 잡히고 아주 잘 토론된 조약”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약은 앞으로 서독의 국회결의를 거쳐 6월말에 모든 토의 과정을 마치고 7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독내에서는 조약내용과 조약성립 과정에 관해서 여러가지의 의견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동독의 공산당(PDS)과 『연맹90』(Bündnis), 서독의 녹색당은 조약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동독 반대당들은 “경제·통화·사회통합은 동독이 서독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흡수되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성립된 조약이라고 보지않고 있다. 서독의 녹색당은 “서독이 동독을 식민지화했고, 특히 통일문제에 있어서 금전, 재정, 통화문제에만 치중하여 통일국가로써 정치적 비전을 전혀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하간 동독의 두 정당과 서독의 녹색정당은 조약 승인을 거부할 것을 명백히 발표했다.

둘째, 동독 사민당과 서독 사민당의 의견차이이다.

동독 사민당은 대연립정부에 참여하면서 외상을 비롯한 중요한 각료직을 차지하고 사실상 국가조약을 지금까지 작성해 온 동독 여당이다. 그러나 서독 사민당은 야당으로 서독정부와 동독정부 간 협상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서독 사민당의 「포겔」(Vogel)당수는 「콜」수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야당도 통일 결정과정에 참여시켜 달라고 강청해 왔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니더작센」(Nieder Sachsen)주선거에서 사민당이 승리함으로써 연방주대표의회(상원격, Bundesrat) 다수가 사민당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연방국회(Bundestag)를 통과한 『국가조약』은 반드시 연방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12월초 연방선거에 사민당 수상 후보로 「콜」수상의 경쟁자로

나설 「자-르」주지사 「라폰테인」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서 그가 주장해온 「콜」수상, 사민당 정부 통일노선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이 조약조항에 추가 내지 보완되지 않으면 법적인 규제력을 발휘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민당 조약수정안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경제·통화·사회통합과 동시에 환경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
- ② 전공산당계의 재산·소유물을 정부에서 몰수하여 국가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경제통합이후 단기적으로 동독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반드시 보호주의 정책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 ④ 고령자에게 약속된 연금수준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
- ⑤ 통일에 관한 모든 결정·해결과정에 야당인 사민당을 참여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조약』과 관련된 논의결과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동독의회에서는 최근에 일부 동독 사민당 의원까지도 조약을 부결하겠다고 하지만 『국가조약』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독에서는 「콜」수상이 야당과 내주에 협상하여 사민당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용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국가조약』은 약간의 수정을 보아 6월말에 서독의회를 통과하고, 7월초부터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다음 세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내통일문제와 통일외교문제가 분리되고 있는 현상으로 써, 이에 따른 서독의 소련에 대한 여러가지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제공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과 통일된 독일의 유럽체제내에서의 입장은 앞으로 『2+4』 회담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전망이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로 볼 때, 소련이 동독을 쉽사리 자기의 영향권에서 독립 분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명확한 증거는 이미 시작된 소련군 철수를 정지한데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서방측의 희망으로서(최근 동독정부도 이에 동조함) 통일된 독일이 나토(NATO) 회원국으로써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여 주고 있으나, 소련은 이에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둘째, 서독이 독일통일에만 열중함에 따라 EC 1992 실현에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EC가맹국 특히 프랑스는 가능한한 빨리 동독을 회원국으로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째, 통일문제는 연방선거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독선거에서 제1위에 올라섰던 기민당은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지자를 상실하고 대도시(동베를린 등)에서도 참패한 반면, 사민당은 종전의 위치를 유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동독의 3월선거시의 「콜」수상의 인기 보너스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실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2개주 서독연방 주대표선거에서도 대참패를 맛보았다.

그럼 12월 2일 서독 연방선거의 「콜」, 「라폰테인」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지금 정치분위기를 본다면 서독에서 「콜」수상의 인기는 저하되어 「라폰테인」의 승리로 돌아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내년 통일독일의 수상은 누구일까?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콜」수상은 급행열차식 통일전략을 전독일선거전으로 옮겨 갈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초 전독 선거는 서독의 사민당뿐만 아니라 동독정부가 찬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콜」수상의 전략은 좀처럼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제·통화·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이 7월부터 발효될 경우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동독에게 미칠 것인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화폐 · 경제 · 사회통합은 새로운 출발

---

동백림 중심부 알렉산더광장, 7월 1일 아침 0시, 독일은행앞에는 수많은 동독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수시간을 기다리다가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도이취 마르크」(DM)를 손에 쥐게 됐다. 마침내 옛날 독일 국가 “Deutschland über alles!”(독일은 어느 나라보다도!)를 바꿔 “DM über alles”(도이취 마르크는 어느 화폐보다도!)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 통용되던 「알루 칩」(Alu Chip:동독돈의 별명=알루미늄으로 만든 돈이라는 뜻)은 사라지고 말았다. 7월 1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시는가 하면, 동시에 이 샴페인이 과연 좋은 샴페인이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럼 경제 · 통화 · 사회통합의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 구주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첫째, 이번 경제 · 통화 통합은 독일 민족이 통일로 가는데 현실적인 성공의 제 1 단계로써, 앞으로 남아 있는 정치적 단계의

절대적인 밑바탕이 될 것이다. 사실상 금년초까지만 해도 「콜」수상의 『10개항』등이 있었으나 경제·통화·사회통합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안이 없었다. 경제·통화통합은 크리스마스 전후에 서독정부의 재무부 한 국장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이다. 야당인 사민당도 금년 3월초에 결의한 『독일 통일로 가는 길』속에 7월 1일의 구상을 처음으로 암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둘째, 수많은 경제학자, 은행가, 경제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1(임금, 연금 등)화폐교환을 관철한 것은 「콜」수상의 정치 우선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콜」수상은 취약한 독일경제를 앞으로 여하히 개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주어진 호조건을 활용하는 정치 우선원칙을 선택했으며, 경제적 합리성은 제2차적인 것으로 미루었다.

셋째, 경제·통화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동독의 경제주권은 서독으로 이양됐으며, 서독의 중앙은행이 동독통화에 대한 모든 관할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동독은 임금, 월급, 집세, 연금 등 부분에 일률적인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됐다. 이것은 종래의 사회경제체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동독의 시장경제체제 실험이 성공할 경우, 이는 『동구의 페레스트로이카』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넷째, 이번 경제·통화·사회통합은 분단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에도 많은 시사를 준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우위, 동일민족의 통일필연성 등은 물론 말할 것 없으나,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서독의 경제력이 막대했다는 사실이다. 우선 서독경제가 소련, 동구경제를 지원할 수 있고, 특히 동독경제를 흡수,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독일처럼 인접국가(폴란드, 체코, 프랑스 등)로부터 제2차대전의 죄과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나라도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국가가 경제·통화통합을 지원 내지는 묵인하는 사실은 서독경제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남북통일의 첩경은 남한이 우선 경제대국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럼 7월 2일 오늘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가? 대단히 흥미있는 사실은 화폐교환을 위해 250억DM을 준비했으나, 하루만에 거의 반정도가 지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동독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어느정도 실업 증가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한 태도, 내일을 위한 절약을 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7월 1일 까지만해도 텅텅비어 있던 백화점, 상점에 지금은 서독상품, 식료품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종래 동독상품(농산품)은 한쪽 구석으로 초라하게 몰리게 되었다.

동독인의 저축액은 지방에 따라 다르다. 남부 「삭센」의 경우, 일인당 평균 저축액이 12,000DM정도이며, 북부 「브란덴부르크」 지방은 10,000마르크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경제의

현실적인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아주 절약·검소한 시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동독인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서독 자동차(벤츠, BMW, 골프등)이다. 서독의 자동차 판매회사는 50,000마르크까지 5년내 상환하는 신용판매 형식으로 동독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독인의 검소함 때문에 앞으로 동독내 상품시장에서 동독인의 소비성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백화점「칼스타트」은 물론이거니와 소매상에서도 예를 들어 열대지방 과일수요(오렌지, 바나나 등)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확정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많은 동독인은 여행(서구)에 있어서만큼은 검소하지 않다. 그리고 종래 강제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동구(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는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동구인들이 동독에 관광여행 오기 위해 예약했던 것들은 통화통합이후 너무나 비싸게 되어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동독인은 경제·통화통합을 “헤엄칠 수 없는 아기가 물속에 던져 버려졌다.”고 비유하고 있다. 현재 동독 실업인구를 총 40만으로 보는데, 이는 최근에 상당히 증가된 것이며,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독에 있는 자동차 공장(「주비카우」공장)은 서독 「폴크스바겐」회사의 50억 마르크 투자로 완전히 근대화, 자동화되어 매일

500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미 조업이 단축됐으며, 이 공장에 종사하는 750명의 외국인 노동자는 7월중에 귀향하게 됐다. 「부나」(Buna) 화학공장은 「루르」지방의 「페바」(Veba) 회사에 의하여 근대화, 자동화되어 18,000종업원중 조만간 1,000명이 해고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실업자가 각처에서 많이 생겨나면서도, 서독기업의 제조업 투자는 기대한 정도에 크게 미흡하여, 서독정부를 대단히 조바심나게 하고 있다. 이때문에 서독경제상은 「디 짜이트」조간지에 “동독에 투자하자”라고 대서특필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경제·통화통합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비평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근심스러운 것은 인플레이이다. 이것은 특히 『통일비용』 때문에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통일비용확정은 불가능하며, 매일 다른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서독은 경제·통화·사회통합을 위하여 얼마나 지불할 예정인가?

동독정부의 계산은,

농산지원 : 62억 DM

수출지원 : 50억 DM

특별기금 : 1,150억 DM

계 1,262억 DM

여기에 의료지원비를 추가하면 1,264억DM이 된다.

그러나 사실상 상기한 액수는 여러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조세면에서 특혜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서독연방정부가 동독지원을 위해 책정한 추가예산을 보면, 1990년 총액 420억DM, 동독 일인당 2,600DM으로 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의 차관을 430억DM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장벽파괴비용, 경기회복지원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독중앙은행 총재는 비관적인 입장에서 동독경제가 조만간에 회복되지 않을 때는 더욱 서독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함께 서독은 동독이 소련에 대해 지고 있는 수출계약 의무이행을 지원해야 하며, 또한 동독기업의 부채(1,180억DM)도 아직도 그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하간 서독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일을 위한 비용』이라는 계산을 보면, 금년도 하반기 430억DM, 내년(1991)에는 약 700억DM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일을 기념하는 양독수상들의 기념사의 핵심이 흥미를 끈다. 「콜」수상은 서독인에게 “어느 국민도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반면, 「드 메지어」수상은 동독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용기를 가집시다.”라고 한 것이다.

## 화폐·경제·사회통합 이후의 동독경제

---

경제·통화·사회통합 조약이 발효한지 한달이 지났다.

통합이후 처음있는 하기세일(Sommerschlußverkauf)이 이번 월요일(30일)부터 시작됐다. 동독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 쇼핑광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허덕이며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헤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서베를린 백화점「카대배」에서는 동독의 먼 곳에서 온 시골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이 피상적으로 번성하는 소비경제의 시나리오 이면에는 동독경제의 일대 위기가 잠재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동독의 신 자본주의자는 이구동성으로 “투자보다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임금지불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불평이 고조되고 있으며, 유명한 회사들도 예외없이 단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있고, 조만간 대량해고사태를 모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합 이후 동독의 서어비스(상업)계통은 완전히 서독 손아귀에



들어 갔다.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결국 우리가 뽑아낸다”고 서독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동독의 생산부분에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서독경제지 「한들스 블랏트」 등은 서독인들의 대동독 투자촉진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전무하다. 서독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은 주간지 「디 짜이트」에 대문짝만한(한페이지를 전부) 투자촉진 홍보를 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방명사, 유지들에게 투자여건 개선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으나 황당무계 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FORSA(서독), GERA(동독) 연구소는 공동으로 202명의 동독 기업체 중역들에게 경제사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동독경제는 대단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금년에만도 서독이 동독에 지출하는 총액은 최저 70Billin DM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동독인 일인당 4,500 DM에 해당되나, 동독의 기업체 중역들은 사태를 낙관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하면

① 금후 12개월내 투자전망에 관해서

증가한다 30%

증가않는다 13%

모른다 57%

여기에서도 투자전망에 대해서 확실히 비관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② 금후 2년간 취업사정(고용 증감)

증가한다 6%

감소한다 78%

증감없음 16%

모른다 0%

고용감소를 예측하는 사람이 4분의 3을 훨씬 넘고 있다.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불과 6%뿐이다.

③ 동독에서 투자장애는 무엇인가?

- (순위) 1위 : 자본부족  
2위 : 경제법규  
3위 : 관료제  
4위 : 임금수준  
5위 : 노동의욕저조

자본부족이 가장 큰 투자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소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서독에 중소기업투자를 위한 여러가지 기금(『통독기금』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독인들이 감히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지불, 수속절차등이 장애가 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동독의 『신자본주의자』들은 전혀 경영지식도 없고, 모험심도 결핍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제법규의 개정은 민영화 속도에

너무 늦다.

아직도 옛날 공산당원들이 「파워 엘리트」(Power Elite)로서 각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투자장애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공산당 뿌리를 뽑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노사간의 임금협상에 의한 임금수준 25%인상은 투자의욕을 갖고 있던 서독기업가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의욕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숙련노동자의 질이 낮다는 점이다.

④ 동독국민들은 경제발전을 어떻게 보는가?

낙관적	2%
비관적	52%
기다려본다	44%
모른다	2%

동독경제전망을 낙관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2%정도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사정도 좋게 보지 않는다.

동독 통계국에서 최근 발표한 경제수치에 의하면 1989년 전반기(6월말)에 비해서 1990년대에는 생산이 7.3%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만 7% 감소했고 작년 6월과 금년 6월을 비교하면 15.1%가 하락되고 있다. 공업부분에서는 69개 업종중에서 단지 13개 업종만이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24개 업종에서는 10%이상 생산이 감소되고 있다. 특히 과자, 카카오, 커피, 차 생산에서는 40%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농업부분에서는 과잉생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조직과 판매조직이 원활히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시장경제적 메카니즘에 의한 수요·공급 균형방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가 동독인이 『동독산』을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잉분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침체는 취업·고용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실업자 수를 약 25만명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비해서 취업가능한 일자리는 3만에 불과하다. 동독의 노동장관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만 약 1백만명이 해고당할 것이며, 농업부문에서 25만명등으로 150만 실업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서독 경제장관은 앞으로 투자증가에 의하여 그렇게 심한 실업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통합 1개월이 지난 지금 동독경제 성적평가는 좋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투자증대이다. 그러나 투자를 관리하고 기업체를 경영할 사람이 없다. 동독의 『신자본주의자』는 아직도 많은 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의 의견이다.

## 통독의 수도는 「베를린」인가, 「본」인가?

---

12월 2일 전독일 총선거는 서독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나, 이에 동독이 추가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통독을 위한 선거로 치뤄지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선거 직후 『독일통일』을 이루자는 기민당(CDU), 기사당(CSU) 주장에 대해, 사민당(SPD), 자민당(FDP) 측은 서독헌법 23조에 의하여 동독이 일단 서독에 흡수되어 『통독』이 이뤄진 후에 12월 2일 총선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총선거 시기가 『통독』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총선거 시기와 함께 통독이 된다는 거의 확실한 가정하에서, 통일된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 혹은 「본」이나에 관해서 심각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베를린」 선호파는 연방 대통령 「바이체커」와 사민당 명예당수 「브란트」 등 독일정치의 거물이 앞장서고 있다. 반면에 「본」 선호파는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본」이 위치하고 있는 주), 「바이에른」주인 바, 전자는 사민

당 정부, 후자는 기사당(CSU)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기민당원이며 현 연방정부 노동장관인 「부립」도 「본」 선호파에 합류했다.

「본」 선호파측 주장의 요점은 무엇인가?

첫째, 「본」이 전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독일역사상 가장 성공한 곳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로 「본」이 『서구 민주주의』에 지역적으로 가까워 서구측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본」을 『독일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와함께 서독 연방주의의 성공 요인으로 각주의 지방정부 수도에 비해서 「본」이 규모가 적은 연방정부 수도였다는 점도 중요했다고 주장한다.

둘째, 「베를린」은 「히틀러」 독재의 중심지이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근원지로서 독재, 파쇼의 상징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만약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노르드라인」주지사 「라우」박사는 수도 이전에 드는 비용이 앞으로 90년대에 걸쳐 총 80 Billion DM정도 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거액은 동독 재건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를린」 선호파측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49년 서독 연방국회 결의에 의하면 “통일독일의 연방

기관(국회, 행정부 등)은 「베를린」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결의가 철회되지 않는한 수도는 당연히 「베를린」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기의 법적 근거보다도 역사적 사실로서, 『히틀러 주의』의 발상지는 「베를린」이 아니고 「바이에른」주였으며, 오히려 히틀러 정권에 가장 큰 반항운동을 한 곳이 「베를린」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베를린」이 오히려 독일민족은 물론 전 서구의 『자유의 상징』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은 「베를린」을 방문하여 “자유를 사랑하는 자는 「베를린」으로 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나도 「베를린」 시민이다”라고 한 사실을 들고 있다.

셋째, 동독의 수도가 「베를린」(동「베를린」)이라는 점이다. 이미 모든 정부청사, 관청, 각국 대사관 등이 이곳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수도 이전비용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도 이전비용을 거론하는 것은 「본」에 살고 있는 관리들의 「애고이즘」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그들의 주택문제,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베를린」 선호파들은 연방기구 전부가 「베를린」으로 옮겨질 필요는 없고, 대통령, 행정부일부, 국회만이라도 이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서독이 모든 점에서 동독을 흡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경제·통화·사회통합을 통하여 동독은 서독에 흡수됐다고 본다. 그렇다면 동독이 통일후에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

엇인가? 이러한 점에서 「베를린」 선호파들은 동독인의 「아이덴티티」(identity) 만이라도 살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베를린」은 문화·학문·예술의 중심지이며, 유럽에서 이와같이 다종다양하고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도시는 없다는 점이다. 우선 지역적으로 유럽의 중심지이며 동독으로 가는 문턱에 있다. 또한 60-70Km 거리에 「폴란드」가 있어 냉전해소·『유럽의 집』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도시로부터 자극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통일된 독일국력을 유럽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통독의 수도는 잠정적인 수도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베를린」이 유럽의 백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중에서 가장 공업생산력이 높다는 점이다. 그만큼 고급인력이 많이 집결해 있는 곳이라는 주장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본부가 앞으로 「베를린」 한복판으로 옮겨올 것이며, 이미 세계각국 특히 일본·대만의 회사·은행들까지도 「베를린」에 진출해 있다. 이러한 점들은 「베를린」에서 세계적인 국제문화·전람회 행사가 자주 열리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베를린」은 앞으로 통일독일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도시가 될 것이다.

1. 유럽의 중심지로서 동·서구를 연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냉전해소에 기여)
2.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과학·기술도시가 될 것이다. (사실상



현재도 그러하다)

3.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문화·예술 도시가 될 것이다. (사실상 현재도 그러하다)

4. 유럽에서 중요한 경제도시로 부각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베를린』 진출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EC전략은 지금까지의 서구전략에서 『중구』 (지금 많이 쓰여지는 말!) 전략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앞으로 유럽경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 화폐 · 경제 · 사회통합 2개월후 평가

---

제1차 통합조약이 발효한 이후(7월 1일) 그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의 평가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통합』이 아무런 준비 없이 급행열차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부수적 현상(대략 현재 동독 실업자 약 40만, 노동시간 단축조치에 포함된 자 약10만, 기업파산, 노동의욕 저조, 경영자·숙련노동자 결핍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통일비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많은 비판으로, 심지어는 통일에 환멸을 느끼는 자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결국 통일은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적 현상들도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체로 지금의 분위기는 사민당의 수상후보 「라폰테인」의 통일의 사회적 차원론이 점차 맞아 들어간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

---

※통일의 사회적 차원론 : 통일과정과 양독체제의 사회개혁 및 삶의 통합과정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

해서는 중간입장에 서 있던 주간지 「디자이너」도 동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압도적인 바 그 의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통합이 정치적 합리성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 「본」 정부는 경제통합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전연 없었다. 이로 인해 경제정책상 공백상태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서독 경제상의 책임이다. 물론 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 시키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교과서나 학설도 없으나, 사회주의체제를 서독 「마르크」 통화권에 통합시키면서 생길수 있는 부작용은 어느정도 예측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동독인에게 이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부터 계몽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둘째, 서독경제상은 최근 중소기업 진흥에만 열중했고 거시적 차원의 경제정책은 경험없는 동독정부에 맡겼다. 그러나 동독정부의 경제담당부서 책임자는 시장경제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연립정부를 성급하게 구성하면서 거의 무명인사들이 갑자기 이러한 중대한 부서를 맡게 되었다. 그럼에도 서독 정부는 그냥 방관했다. 여기에다가 동독수상 자신이 이 방면에 얼마나 무능했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에 들어서 그는 중요 경제담당부서 3장관(경제·재무·농업)을 퇴진시키고 차관들로 하여금 그 직무를 맡게했다. 신탁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아직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한 정책이 어떠한가?

첫째, 8,000개 이상의 국영기업을 하루라도 빨리 민영화시키는 작업이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국영기업의 경영자들이 공산당 당원 아니면 국가안전기구(Stasi)와 밀접한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둘째, 대동독 투자의 증대이다. 대동독 투자는 약속은 많았지만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는 동독의 토지·건물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특히 사유재산문제는 전연 해결되지 않고 있다.

셋째, 투자유치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회간접자본이다. 특히 통신, 도로, 상수도 등이 시급하다. 이중에서도 가장 문제되고 후진상태에 있는 것은 전화시설이다. 아직도 동·서 베를린간의 전화소통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며 동·서독간은 더하다. 앞으로 동독의 전화시설이 세계에서 최첨단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나아진 것을 느낄 수 없다.

넷째, 정부지원제도의 개선이다. 서독의 동독국경 인접 지방개발지원금 제도는 현재도 유효해서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인은 총 투자 23%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동독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단지 12%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섯째, 부채상환 문제가 있다. 동독기업의 부채는 약 850억

DM정도이다. 대부분이 부실화된 동독기업이 언제 이 부채를 상환하고 재기할런지 아무런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속히 이 기업부채를 무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상환의 의무가 있는 이상 동독기업들의 새로운 출발은 전연 기대할 수 없다.

여섯째, 동독기업의 경영자는 절대 다수가 공산당원이었다. 물론 과도기에 있어서 이러한 경영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다소 수궁이 같지 모르나, 시장경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경영자, 새로운 경영철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독의 경영자가 일시 동독기업에서 종사하는 식의 방법이나, 동독 경영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업차원에만 맡기고 있을 뿐이다.

일곱째, 너무나 오랫동안 통일독일의 『수도』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8월31일 가조인된 제2차 통합조약에서는 「베를린」을 통일독일의 수도로 정하고 있으나, 독일대통령과 행정부·입법부는 우선 「본」에 남겨진다.

이것은 「본」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본다. 통일된 독일의 수도로써 독일은 물론 유럽중심지에 놓여 있는 「베를린」에 행정·입법부가 설치될 경우, 「베를린」은 일종의 병참(logistic)기지로서 동독재건 나아가서는 동구재건에 박차를 가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흔히들 “미개발지역을 개척해가는데는 『창시자적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동독인에게 정신적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통합 2개월이 지난 지금 동독인의 82%는 여하튼 동독지역에 남겠다고 했으며 절대로 동독에서 살지않겠다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동독인은 동독거주를 선호하고 있으나 사실상 동독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독인의 53%가 자기 직장을 상실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만 7%만이 자기 직장에 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앞으로 동독의 발전에 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37%에 불과하고, 28%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35%의 동독인은 낙관과 비관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통화통합이후에 동·서독인의 독일통화 안정성에 관한 평가는 서독통화를 처음으로 만져보는 동독인 82%가 독일통화는 앞으로도 안정성을 가질 것이라고 보는 반면 오히려 41%의 서독인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동독인이 경제·화폐통합이후 자기 직장에 관한 불안, 임금에 관한 불만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에 관해서는 다만 8%정도만이 부정적이고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콧트부스」시 실업자 여론조사에 의하면 “실업자이지만 정치변화의 바퀴를 다시 돌리기는 싫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럼 동독경제부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연방정부 내독연구소 및 자유베를린대 동구연구소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경제주체들에게 경제혁신을 위한 정신적인 전제조건이 전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시장경

제 운영에 필수 조건인 자율적 결정을 하는 능력부족, 부족한 지식과 경험이 무계획한 동분서주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모든 경제 조직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혈혁명이 동독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불행스럽게도 과거 공산당 정권하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엘리트들이 다시금 자기들의 위치를 공고히 확보한 것이다. 즉, 상징만 바뀌고 옛날의 경제관료 구조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동독경제성의 3,100명의 관료중에서 서독정부가 흡수할 400명은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원이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수일전에 왜 동독신탁회사(민영화 책임기관)사장이 사퇴했는지 쉽게 알수 있다.

## 동독인은 게르만 민족인가?

---

독일통일의 큰 요소를 논할 때, 외국에서는 흔히들 『게르만민족의 특성』을 든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들을 수 있는 말이다. 『역시 독일민족은 다르다!』

과연 독일통일의 근본요소의 하나가 「게르만」민족의 특성일까?

그럼 동독주민들은 과연 어느정도로 『게르만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말을 바꾼다면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제기되어 토론될 문제가 “북한주민은 어느정도 한민족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제기의 출발점은 일반적인 통일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문화주의적 주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독인구는 약 1,700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 60세 이상은 15%정도이다. 다시 말한다면 1930년생이 지금 60세이므로,



85%의 동독인은 파쇼 히틀러정권과 스탈린 독재체제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1930년생인 동독주민이 15세가 된 1945년이 동·서독이 분단되고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다시 말하자면 대부분의 동독인은 『공산주의와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동독인은 서독의 자본주의·민주주의체제에서 성장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간성·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난후 판명되었다.

동독인은 생활관, 세계관, 일상생활문화 등등 모든면에서 서독인과 판이하며, 동독인이 구사하는 언어, 의견교환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럼 왜 그렇게 동독인은 다를까?

맑스와 엥겔스는 지금부터 약 140년전 『공산주의 강령』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시민사회를 대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개 개인의 자율적 발전이 모든 사람들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해방설』에 현혹됐다. 그러나 『인간해방설』의 실천자들은 개개인의 『외면적 강제』로부터의 해방이 공산주의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먼저 생산수단의 국유화, 집단화를 수행하고 그 다음 『인간해방』이라는 『현실적 사회주의』가 풍미했다. 이로써 논리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진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이상』을 위한 『현실의 박탈』로 나타났다.

동독 전수상 「발터 울부리트」(Walter Ulbricht)의 『신사회주의 인간상』은 이러한 모델의 구체화였다. 즉, 인간 역사상에서 처음 시행된 실험의 공식은 첫째, 국유화, 둘째, (어느때에 가서는)인간해방이라고 공산당은(어디서든지)논리의 역방향으로 가버렸다.

공산당은 공업화의 가장 중요한 촉진 요소가 개개인의 자기 발전, 스스로의 행동 및 결정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차원의 공업발전단계에서 『의·식·주』만 해결하면 인간해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1945년 전쟁이 끝나자 소련에서 귀향한 시인, 사상가, 정치가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스탈린」을 안고 왔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볼셰비즘」을 뿌리 박아 왔다. 이들의 생각은 인간의 행복은 노동에서 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동독인은 직장을 갖게 되고, 소득을 벌게되고,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배치받았다.

소위 말하는 『동독 노동·농민 사회주의국가』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배급기관으로 전락하고, 생활과 노동에 관한 환희는 사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동독 공산주의의 실패는 1985년 고르바췌프의 등장과 함께 점차 표면화됐다. 『사회주의 이상』과 『동독의 실상』간에 너무나 큰 간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현실의 거짓을 한탄하면서, 미로에서 있는 불쌍한 자신에 대하여 눈물만 삼키곤 했다.”고 동독 여성시인이자 자연과학자인 「헬가 쾨니스돌프」(Helga Königsdorf)는

고백했다.

동독인은 지금 5분의 1정도가 노이로제에 걸려있다고 한다.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기 전만해도 동베를린 건강의 집(Haus der Gesundheit) 정신과에 찾아오는 사람은 년 2,500명 이상이었다.

동독 「뵘프케」(Höpke)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동독인은 “권위지향적이고 극도로 통속적이며 공포감,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공격적 자세는 전연 없다”고 되어 있다.

그는 동독인의 생활관, 생활태도, 세계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동독인은 외모부터 다르다

동독인의 얼굴, 용모, 피부는 서독인과 완전히 다르다. 눈동자는 피로하며, 불안하고 긴장된 표정이다. 얼굴빛깔은 고생한 사람으로써 피부색은 약간 빨갛다. 음식과 사용하는 비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플라스틱봉지를 가지고 다닌다. 그 속에는 커피, 바나나, 오렌지 등이 들어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서독에 와서 환영금 100마르크를 받아 가장 빨리 구입하는 것은 TV, 카메라, 테이프, 레코드였으며, 그들이 타고가는 약취나는 차(2기통 「트라반트」)에는 포장박스가 가득차 있었다.

동독인의 제슈처는 대단히 통제되어 있고 주로 눈짓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마케팅회사 「린타스」(Lintas) (서독에서 가장 매상고가 큰회사)는 “동독 제슈처를 하는 전문가를 찾는다.”는 채용광

고를 하고 있다.

② 동독인은 동독산 상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동독인은 자기네 상품을 『무조건』 싫어한다. 야채, 고기, 빵 등 동독산 제품이 팔리지 않고, 공산주의 유통조직이 붕괴됨에 따라 과잉공급의 현상이 일어나 야채, 고기 등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동독 TV에서 수주전 어린돼지를 땅에 때려 죽이는 장면이 방송됐다. 아무도 사려고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삭센은 삭센상품을 사자』는 캠페인이 이러한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 서베를린의 유명한 백화점 「카대배」에서는 수십톤의 동독야채를 실어와 팔고 있는데 주로 사는 사람들은 동베를린 사람이다.

그리고 동독인은 도둑질을 많이 한다. 이 때문에 서독의 레코드, 라디오 상점에는 도둑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많은 동독 청년들은 컴퓨터디스크, 레코드판을 훔쳐간다.

③ 동독인은 노동하기를 싫어한다.

동독인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저임수준, 공해투성이(「비터펠트」(Bitterfeld)가 그 상징 : 공산권에서 가장 심한곳)속에서 노동하여 왔다. 공장의 관리자, 경영자는 전부 공산당원이거나 정부정보원(Stasi)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경영실력, 경험이 없는 자였다. 그 결과 동독인들은 적게 노동하고 돈 많이 버는(암노동) 것을 선호한다. 고로 “게르만민족은 부지런하다.”는 것은 선입견이다.

④ 동독인은 극단의 민주주의 표현을 구사한다.

동독인은 이제까지 공산주의 용어속에서 자랐지만은 지금은 너무나 정확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표현을 구사한다. 『다수결원칙』, 『공동결정권』, 『토의과정』 등등의 용어를 다반사로 사용한다. 그들은 또한 웅변술이 대단하다. 어디서나 조리있게, 체계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동독인이다. 심지어 그들의 『말』은 곧바로 인쇄할 수 있다고(druckreif)한다.

⑤ 동독인은 자동차를 좋아한다.

최근 동독인의 소비성향 조사결과를 보면 제일위가 자동차, 칼라TV, 카메라 순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차는 2기통 「트라반트」인데 『악취의 결정체』라고 한다. 그들은 지난해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난 후 사실상 『도로 통일』이 됐다고 하면서 그들의 차에 서독마크 BRD, 동독마크 DDR를 합한 BRDDR이라는 마크를 붙였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연하게 D만을 붙인다. 즉, 교통면에서는 벌써 통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인이 사는 차는 『빠른차』, 『깨끗한 차』, 즉 벤츠, BMW, 골프, 아우디 등인데 중고차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5-6년 월부로 산다. 힘에 벅차지만은 꼭 서독·서구차를 타고 어디든지 한번 여행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절실한 포부이다. 동독의 속도제한은 100Km이나 서독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들은 동독의 법규를 지키지 않고 동독에서도 150Km 이상의 속도로 달린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곳이 동독이며, 자동차 사고 사망자도 동독이 가장 많다.

⑥ 동독인은 『민족주의』, 『국수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동독인은 『독일인』, 서독은 『유럽인』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 동독인은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독의 대부분 사람은 통일에 관한 관심이 크지 않다. 특히, 젊은층의 70%이상은 통일을 선호않으며, 오히려 『EC 1992통합』이 달성되면 유럽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

동독인은 『독일인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히 큰 자부심과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쿠바, 아프리카, 베트남에서 온 외국노동자를 무시하고 경멸하며, 인종차별도 심하다. 이태리에서 열린 축구 월드컵에서 서독이 정상에 올랐을 때, 동독의 소위 말하는 「스킨헤드」(Skinheads)족은 외국인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동독인은 폴란드에 가서 이상한 『독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통화통합이후 동독인도 서독의 마르크를 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상한 동독인을 보면서 많은 지식인, 문화인, 학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콜」 수상은 급행열차식으로 정치적 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다른 두민족이 융합하는데는 삶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차 풍미하고 있다.

사실상 40년간의 긴세월속을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라나고, 생활해 온 동독인은 완전히 다른 『게르만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정론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다른 생활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독일인』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이 아무리 민주주의 표현을 완벽히 구사한다해도, 시

장경제원칙을 준수하려해도 단시간에 모든 것이 체질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한반도의 『북한사람』은 그간 어떻게 변했으며, 그곳에서 나서, 자라난 사람은 과연 어떤 『한민족』일까? 그러한 의미에서 “핏줄이 같은 한민족은 자동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문화주의적 논리를 재고하고, 한반도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자인 북한주민을 어떻게 한민족으로 융합시킬 것인가”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김일성 수령체제』라는 공산체제에서 성장한 북한사람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11월 9일』 장벽철거 1년의 평가

---

작년 11월 9일 새벽이었다. 베를린의 장벽이 개통되었다는 소식이 라디오를 통하여 전해지자 수많은 동베를린인과 동독인들은 무작정 서독으로 달려 나왔다.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사람들, 이른 새벽에 장사진을 이루며 서독/서베를린으로 달려온 「트라비」(자동차 이름)들은 동서독간의 장벽의 붕괴를 축하했다.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인이 서독의 TV를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세월(『TV 통일시대』)을 지나, 이제 동서독인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도로의 해방』 즉, 『도로통일』이 이뤄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1989년 11월 9일을 『독일 통일의 날』이라고 본다. (물론 정식으로 독일통일은 1990년 10월 3일에 이루어졌지만.) 장벽이 무너지고 불과 11개월 만에 독일은 통일됐다. 이렇게 빠르게 독일 통일이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을 『20세기의 기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을 『20세기 최고절작』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11월9일』이 일년 지난 오늘 통일독일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독일인의 습성을 논할 때 『완전주의』(Perfektionismus)를 강조한다. 즉, 만사에 독일인은 빈틈없이 준비하며 성취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정치적 측면과 외교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모든면에서 비완전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완전성에서 오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제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통합이후 드러난 사실중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동·서독 주민들이 독일어를 사용하며 2차대전 이후 분할된 동일민족이기 때문에 『동질의 독일인』이라는 가정이 완전히 오류였다는 사실이다. 동독인과 서독인은 완전히 다른 두민족으로 발전하여 생활철학, 세계관, 종교관, 노동의식, 일상문화 모든면에서 판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학자들간에 흔히 쓰여지는 용어는 『동독민속학』, 『동독인류학』등이다. 즉 『동독민족』을 연구·분석한 바탕위에서 동·서독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 다시말해 『생활의 통일』, 『의식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40년간의 상호격리 생활이 얼마나 큰 충격(impact)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셋째, 날이 가면 갈수록 『사회주의 허상』이 더욱더 폭로되고 있다. 동독의 실상은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사회주의 현실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

회주의 이론가들을 전례없는 위기속으로 끌어넣어 버렸다. 동독의 공산당(PDS)은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거대자본·재산을 부정축적해 왔고, 최근 일부 재산도피가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공산당 최고간부 여러명이 체포되는 추태를 드러냈다.

그리고 과거 서독정부속에 침투했던 동독정부의 정보활동(Stasi)이 폭로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서독의 정보계통 최고 간부까지도 동독정부의 손아귀에서 조정되어 왔다는 것이 폭로됐다. 결국 『노동을 통한 인간해방설』이나 『상이체제 공존을 통한 평화유지』라는 것이 망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네째, 공산당·공산정권의 유산은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도 과거 동독지역의 모든 조직, 단체, 학교, 기업체 등등에는 공산당의 뿌리가 철저히 박혀 있다. 과거청산을 하는 사람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독정부, 정당, 단체들도 과거 동독정부·단체들의 간부를 불가피 기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월 14일 구동독 연방 5개주 선거에서 「삭센」주, 「브란덴부르크」주를 제외한 다른주에서 승리한 기민당 세력의 중추는 대부분이 공산당과 동조했던 기민당원(블록정당)이었다.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여론상으로 우세하지만, 2차대전 당시 나치 동조자의 과거청산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은 이것이 “법적으로만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섯째, 작년 『11월 9일』은 단순히 독일통일이 이뤄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사회주의의 최종적인 종말(적어도 서구에서는)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역사상 획기적인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즉, 동독이 서독 시장경제체제에 들어와 자본주의화 되고, 다른 동구제국은 이미 시작한 자본주의 경제체제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통일독일은 소련을 포함하는 동구공산권 전역이 자본주의 경제화하는데 선도적인 기능을 맡게 된 것이며, 이는 독일이 단순히 경제대국이 된다는 사실 이상으로 냉전하의 경제·정치체제를 자유시장·민주체제화 하는데 큰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과연 독일은 이런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자격과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가?

서구인들은 이 점에 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독일인이 『전쟁선호국』에서 『경제성장 선호국』으로 너무나 급격히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 과제는 결국 EC국가 전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과연 EC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도 앞으로 두고봐야 할 것이다.

이제 독일인의 의식속에서 『11월 9일』은 먼 옛날처럼 되어 버렸다. 통일독일속에서 빈부격차·생산성격차·개발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크게 기대했던 제조업 투자는 전무상태이다. 실업자(완전실업자+시간 노동자)는 이미 2백만 정도에 달한다. 최근 독일 경제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연말까지 3백만의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4백만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독일정부가 이렇다할 『동독개발계획』

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중전의 국영기업의 사영화』에만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영화 작업』에서도 크게 성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의 지속은 일부 정치가와 정당의 단기적 목적 달성에는 이용될 수 있을 것이나 통일 의 본 뜻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11월 9일』이 1년 지난 현재 독일에서는 통일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많아 지고 있다.

## 『12월 2일』 독일 총선거 : 독일 통일의 완성

---

12월 2일 동서독의 총선거에 의하여 처음으로 통일된 독일 국회가 탄생된다. 10월 3일 이후 잠정적인 『통일국회』를 종식하고, 이제부터 정식으로 『통일독일』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동독과 서독이 없어지고 『독일』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독일통일은 많은 유럽사람들 심지어 독일인 자신에게도 쉽게 머리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만 여하튼 역사적 기정사실로 되어버렸다.

지금까지(현지시간 밤 10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독일통일을 실현한 연정(기민당, 기사당, 자민당)은 절대다수를 더욱 확대하여 55%선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자는 사민당, 공산당의 후신인 PDS와 녹색당 등 군소정당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선거결과 예측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독일 통일을 지상과제로 추구해 온 서독 연정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연한 말이지만 그 의미는 중요하다. 독일 국민들은 역사적인 기회를 제대로 포착해서 『정치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독일 민족통일을 실현한 정당들에게 많은 표를 던져 주었으며, 나아가서는 현 서독 연정이 동독재건 또한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해서 잘 추진해 나갈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둘째, 승리한 여당중에서 가장 성공한 정당은 자민당(FDP)이다. 이번 선거에서 기민당은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나, 그 비율은 1987년 총선에 머물렀다. 자민당의 성공은 현 연정의 외상인 자민당 소속의 「한스 디트리히 겐서」에 힘입은 바가 크다. 독일 국민들은 그가 연정 각료중에서 가장 신념있는 정치가로서 독일통일의 외적 국면을 해결한 『2+4 회담』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겐서」 외상은 동독 「할레」(Halle)출신으로 자민당이 동독지역에서 많은 득표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세째, 독일 공산당(PDS)의 몰락이다. 공교롭게도 오늘 선거결과가 TV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전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가 함께 보도되었다. (그는 현재 동독 지역의 소련군 병원에서 치료중이어서 체포여부는 소련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행히도 동독 공산당은 동독과 서독지역에 이원적으로 적용한 선거법에 의해 적은 득표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

해 공산당의 활동이 종지부를 찍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째, 사민당의 석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민당의 패배는 연정의 낙승과 더불어 재미있는 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민당은 처음부터 『독일통일 급행열차』를 반대하여, 양독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점진적 조화를 바탕으로 한 『서행』식 통일을 주장했다. 사실 「콜」 수상의 『통일의 정치적 합리성』에 비해 사민당 당수 「라폰테인」의 『통일의 사회적 차원론』이 보다 현실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독일국민 특히 동독주민들은 우선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독일의 정치적 통일에 대한 선거였다고 집약해 표현할 수 있다. 금년도에 동독에서 3차례 있었던 선거를 주시해오던 서독인들도 결국 독일통일에 박수를 보내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앞으로 통일독일이 해결해 나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해답을 주지 않았다.

통독과정에서 현재 동독에는 약 1백 5십만 실업자가 발생하고 서독에도 약 1백 8십만의 실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통일로 인해 막대한 자본투자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독일통일을 우선으로 한 것은 독일민족의 단결력을 보여준 것이다.

통일독일은 앞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오

늘 『12월 2일』은 이를 위한 출발신호로 볼 수 있다 즉, 오늘을 기점으로 유럽의 정치, 경제 판도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통일의 완성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새삼스러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본다.

첫째, 우리는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우리는 새로운 강대국 독일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 독일은 지금 동구국가 특히 소련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촉진시키고 있어, 우리의 북방정책 나아가 통일과 관련한 독일과의 긴밀한 관계증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 독일통일의 전개과정

---

인쇄일 1990년 12월 22일

발행일 1990년 12월 24일

발행처 국토통일원

인쇄처 정문사문화(주)

---